

광주시·전남도, 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추진

국가 차원 제도적 지원 필요
경제·의료 지원...추모 공간도
시, 전일빌딩 '1229마음센터'
도, 공항 인근에 치유 숲·정원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심리적·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추모 및 치유 공간 마련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유족·국회·정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희생자의 보이지 않는 유서에 따라 재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심리적·경제적 타격을 입은 유가족부터 시민까지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우선 참사 추모와 피해 지원의 근거가 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의료 지원 △유가족 포함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자조공간 마련 △참사로 큰 타격을 받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이 담기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심리적·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민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추모 공간을 추진 중인 가운데 9일 무안국제공항 대합실 2층 계단에는 추모객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나건호 기자

강 시장은 "우선 유족의 심리치료를 위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전일빌딩245건물에 공간을 마련해 가칭 '1229마음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유족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소는 광주 지역 유족의 접근성도 고려해 (유가족) 협의를 통해 최종 선택할 계획"이라며 "1229마음센터는 유가족 뿐만 아니라 아픔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수시로 만나 소소한 일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치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였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지원에도 나선다.

강 시장은 "우선 다음주부터 광주시에서 피해접수 창구를 마련해 관광업계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우선 소상공인 특례보증 50억원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관광업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여행 취소사례가 1000여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 시장은 "특별법에 담긴 구체적인 내

용을 준비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참사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주도할 국회 특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국회의원, 국회 행안위원장과의 만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유가족과 시민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와 치유의 문화제'도 유가족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심리상담과 긴급생계비 지원, 특별법 제정과 추모공간 조성, 안전시

설 확충과 조기 운항 등을 골자로 한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향후 5년간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및 돌봄서비스 추진과 더불어 비극적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합리적 조사 및 대책을 정부에 강력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유가족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위험군은 민간 전문가를 매칭해 최대 5년 동안 1대1 상담을 지원하고, 도 마음건강치유센터를 통해 전문상담과 힐링 프로그램을 5년 동안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행 1개월에 불과한 긴급 돌봄서비스를 최장 6개월까지 확대하고, 유가족들이 병원이나 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1인 월 10만원, 1년간 교통비 지원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 사고로 인한 배상금, 위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피해 보상을 위한 근거 마련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추모 사업·추모공원 설립도 추진한다.

추모공원의 경우 무안공항 인근 7만㎡ 규모로, 460억 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이다. 추모공간에는 추모탑과 추모홀, 방문객센터를 비롯해 유가족 위로를 위한 숲과 정원 조성을 통해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로 나아가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강 시장 "민간·군공항 이전 전남도와 폭넓은 대화"

"정부 협의체 중단 등 어려운 상황"
"무안공항 회복에 적극 협의·지원"

강기정 광주시장이 제주항공 참사 이후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광주와 전남의 폭넓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9일 오전 광주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말 정부 주도 협의체 논의 중단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12일만에 광주민간·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공항 무안공항 통합이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참사를 보면서 광주와 전남은 하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말을 꺼냈다.

강 시장은 "지난해 말 계엄이 끝나고 탄핵정국 속에서도 광주공항 무안이전을 위한 범정부협의체 논의가 됐고 일정까지

잡았는데 이번 여객기 참사로 인해 협의체 논의조차 불투명하게 됐다"면서도 "참사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가 피해 회복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광주와 전남은 하나인 것을 증명했다. 행정구역은 떨어져 있지만 공항을 기준으로 하나인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문공항을 만드는데 광주와 전남이 더 폭넓은 대화, 창의적인 대화를 해야 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그동안 공항통합이전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무안공항을 서남권지역을 대표하는 관문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광주공항 무안공항 통합이전은 지난해 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김산 무안군수가 3자 논의까지 진행됐었다. 이후 12월에는 총리실 주관의 범정부협의체가 동결됐다. 앞선달 댈친격으로 같은 달 29일 무안공항에서는 181명의 탑승객 중 179명이 숨지는 대형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해당 안전은 아예 입박으로 나오지

도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강 시장의 발언으로 무안공항이 이전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되면서 향후 무안공항 회복을 위해 활성화 대책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무안공항은 코로나19 시기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무안공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